기고

여 영 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기회와 조건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국가 경쟁력 차이는 신뢰자본 차이"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신뢰자본이 축적될수록 혁신주체 간 위험이 공유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며, 각종 거래비용이 감소해 경제체제 전반의 학습 효율성 및 외부효과가 증대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신뢰부족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일반화된 신뢰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보고서(World Value Survey)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26.6%만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더불어, OECD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 수치와 순위는 상승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는 정부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도를 불러오고, 경제사회 및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한다. 그에 따라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 이행 및 추진과정 내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협치와 소통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요소로서 '데이터 기반(data-based) 정책결정(혹은, 증거 기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과거 주요 정책결정과정이 주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데올로기나 특정 의견 및 관행에 의존하여, 정부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문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는 데이터(정보) 및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부정책의 정당성의 원천을 객관성 및 합리성에 두자는 정책적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경제 및 시민사회 간 소통의 접점이 정책정보 및 관련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및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정책의사결정은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함께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효용성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 이슈 및 환경변화 예측·전망과 부문별 모니터링 체계 기반 문제 진단 및 정책대안 발굴 등에 빅데이터 및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부처 및 공공 부문은 데이터 수집, 저장 등 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는 통계자료, 정보 및 데이터 등과 같은 정책 증거의 생산과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련 인프라 구축을 넘어,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정의 실질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선제 조건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주요 부처 및 공공 부문에서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 및 정보(증거)들을 어떤 정책문제 해결에 활용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책결정과정 및 민간 부문에서 적극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문별 사회문제와 정책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전략적으로 파악하는 정부의 전문성 배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합리성 및 실용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정 내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및 증거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 및 이행되더라도, 맥락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정교화될 때, 정책 수용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정책문제들은 다양한 요소들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복합화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므로, 특정 지표나 데이터로 포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의견 및 창의력이 정책과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해석 및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 과정에서 정책입안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견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및 근거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사업 및 과제를 과감히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 및 관료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 및 실용성이 훼손될 수 있다. 증거 및 데이터 선택과정에 있어서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및 증거기반 정책평가 과정 내 책임성 및 전문성에 근거한 전문가 활용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정책입안자 및 정책정보 수요자들의 정치화를 해소하고, 배태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데이터 해석 및 적용과정에 있어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정보 수요자와 연구자 간 지식공유를 촉진하고, 증거 및 데이터 활용 방법론을 습득하는 학습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각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 및 데이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고, 상이한 데이터 생산 및 관리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기관별 상이한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수준은 정책증거 간 충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관 및 부처 간 상호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 및 증거에 대해 논의를 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제공하고, 정보 및 데이터 축적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선제 조건들을 해결함으로써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실질화를 실현하고 정부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에 덧옷을 챙기는 걸 보면 이제 겨울이 다가옴을 느낀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사람들은 기온이나 그 계절만이 갖는 색깔로써 느끼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은 점차 증가하는 화재출동으로도 실감할 수가 있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난방기구의 증가 및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 일반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불조심 홍보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소방안전교육과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119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등 대대적인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앞으로 비대면 화재예방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말아야 하고 난로 주위에는 항상 소화기나 모래 등을 비치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보일러실과 난로 주변에 어린이들만 남겨둔 채 자리를 뜨거나 외출하는 것을 삼가고 특히 성냥이나 라이터 등 물건들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평소 불에 대한 무서움을 인식시켜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적치하거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집을 비울 때는 전열기구 및 가스기구 등을 확인하고 잠깐 집을 비울 때에도 음식물 등을 불에 올려놓고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처럼 화재예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선근/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